

안전소식

건설현장의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 심각

금년 8월말 현재 건설중대재해 219건중 16건 발생, 안전대책마련 시급

건설현장의 크레인과 관련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크레인 작업시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공단의 중대재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중대재해 2백 19건중 16건이 발생했고, 최근들어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년 2월 (주) ○○지질축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백호우를 인양하다 크레인이 전복돼 작업자 1명이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8월에는 무려 5건의 크레인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 5명의 작업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는 크레인의 용도의 사용과 무리한 작업방법, 그리고 안전장치(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제동장치, 해지장치 등) 불량 등의 사고원인 외에도 부적격 와이어 로우프 달기 체인, 후크, 샤펀 등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크레인 자체검사 및 작업시작전 점검 미실시, 전용 탑승설비 안전기준 미준수, 신호불일치(신호방법 미숙지, 교육 미실시), 조립·해체 조립시 안전조치 미실시 등도 크레인 관련 중대재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공단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크레인의 용도와 사용을 금지하고 과부하 방지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와 유효하게 작동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적격 와이어 로우프(소선 10% 이상 절단, 공칭지름 7% 초과 감소, 킥크 또는 변형, 부식된 것)의 사용을 금지하고

적합한 전용탑승설비 설치는 물론 탑승설비를 달아올린 상태에서는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시키는 등의 크레인 관련 주요 재해예방대책을 제시했다.

〈안전보건정보 10월 15일자〉

근로자 3명이상 死亡災害발생뎨 최고 1년간 入札참여 制限

노동부, 無災害업체 保險料 경감도

노동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하는 重大災害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1년 동안 각종 公共工事に 대한 入札參加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建設現場에서의 재해 발생이 작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올들어 지난 상반기중 建設災害로 인한 경제적 損失이 8천억원으로 전체 產災에 따른 경제손실(2조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建設災害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災害發生, 특히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안에 産業安全保健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 사망하는 重大災害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4~12개월간 公共工事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특히 重大災害의 규모에 따라 각각 사망 3~5명의 경우 4개월, 6~9명 6개월, 10명 이상 12개월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되 建設業體의 평소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기간을 災害率이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기간의 절반까지 단축시켜주는 반면 평균보다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준보다 2분의 1까지

늘리기도 했다.

이와 함께 勞働部는 대규모 중대재해를 유발, 入札참가 제한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2분의 1 동안 영업정지처분을 병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勞働部는 이처럼 災害다발업체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강화하는 대신 재해를 적게 발생시킨 建設業體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 保險料를 낮춰주고 각종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혜택을 늘려 업계의 자율적인 재해예방노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日刊建設 10월 18일자〉

## 건설現場 추락·死亡재해 잇따라

### 産安公園, 9·10월 15명 死傷

建設現場의 안전설비 미비로 작업중인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重大災害가 빈발하고 있다.

23일 韓國産業安全工團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建設現場에서 작업발판 不良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한 災害가 잇따라 발생,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3명은 크게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D개발이 시공중인 大邱지산무학맨션 신축공사현장에서는 20층 엘리베이터피트 옹벽콘크리트 타설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작업발판붕괴로 추락,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 Y건설의 (주)유성전자 工場증축공사현장에서는 틀비계 위에서 연통을 절단하던 용접공 1명이 3.5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S建設의 大田선샤인프라자 신축공사현장에서는 형틀목공 1명이 거푸집조립작업중 비계발판에서 추락, 사망했으며 M건설이 시공중인 光州두암 1차파크맨션 공사현장에서는 방수작업중인

페인트공 1명이 달비계 로프가 풀리면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C社가 시공중인 天安 쌍룡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는 외부거푸집을 조립하던 형틀목공 1명이 12m 아래로 떨어져 죽었으며 H社의 山本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작업발판이 기울면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또 T社가 시공중인 忠北도 丹陽군 성신양회 빌딩 증설공사현장에서는 가설사다리의 발판이 부러지면서 목공 1명이 32m 아래로 추락, 사망했으며 S社의 서울북부도시고속도로 1공구현장에서는 강제거푸집을 조립중이던 비계공 1명이 거푸집을 잡고 내려오다 12m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한편 産業安全工團도 전형적 在來型 재해인 추락사고를 예방키 위해서는 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 작업전 작업발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日刊建設 10월 25일자〉

## 건설 災害豫防활동 대폭 強化

### 勞働部, 내년 施設資金 453억 지원 등

#### 재해 多發社 PQ심사 때 減點조치

勞働部는 산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災害豫防施設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建設災害 등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일 勞働部에 따르면 내년까지 産災率을 선진국 수준인 1% 미만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내년 産災豫防施設資金 용자규모를 올해보다 3억5천만원 정도 많은 453억3천만원 수준으로 늘리고

建設災害예방강화 등 산재감소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勞働部는 이에 따라 내년에 事業場의 위험機械・機具 대체비, 不良작업환경개선비 등 産災豫防시설자금 453억원을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年利 6% 3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90%까지 융자해 줄 계획이다.

또 建設災害예방강화 및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원, 직업병 예방대책 추진, 무재해운동 등 産災감소 특별대책의 추진을 위해 47억1천 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勞働部는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 100대 건설업체의 '92년 業體別 재해율을 발표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매년 大型업체의 재해율 현황을 공표, PQ심사시 재해율이 平均値를 웃도는 업체에 대해 감점조치토록 하고 大型事故를 유발한 建設業體는 사망자수에 따라 최고 12개월동안 公共工事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勞働部는 이밖에 産災예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仁川시 北구 九山동에 지하 2층 지상 6층 延面積 7천200坪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종합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우선 내년에 사업비로 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日刊建設 11월 2일자〉

위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민간책임감리제가 시행되는 내년을 不實工事추방 元年의 해로 만들어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全過程에 걸친 구조적 부실요인을 근절하고 국내시장개방에 대비한 建設業 경쟁력강화를 적극 도모키로 했다.

이와 함께 建設部는 건설업체의 성실시공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建設業法 등 관련 法令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실시공업체 및 관련기술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不法하도급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 일괄하도급의 경우 면허취소 조치하고 허위보고업체는 최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또 건설기술향상도모와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감리제도 改善策의 일환으로 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확대,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의 모든 公共公사는 책임감리를 받도록 하고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50억원 미만이라도 부분책임감리를 실시토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建設部는 감리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실질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리 대가를 공사규모별로 현행의 159~3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등록기준환화 등 감리전문회사육성방안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日刊建設 11월 8일자〉

## 내년 '不實工事추방 元年'으로

建設部, 민간 責任監理制 시행 계기

市場개방대비 競爭力 강화 도모

建設部는 내년을 '부실공사추방 元年의 해'로 삼아 建設産業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6일 建設部는 지방청을 포함한 4급 이상 全 간부직원을 소집, 건설공사安全과 不實방지를

## 건설技術者 양성 時急하다

建協분석, 需要 10.8萬에 可用인력 8.8萬 불과

소규모 建築業 신설땀 스키웃 波動

建設技術者가 수요와 공급을 감안할 때 絶對數가 부족해 국내 건설기술수준향상 저해, 건설

업체 경쟁력 약화, 不實施工誘導 등의 副作用을 낳고 있어 건설기술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확충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건설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업계는 지금까지 소극성을 보여왔던 자체기술자 양성교육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고 당국에서도 건설업법상 면허요건인 기술자 보유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재 수요와 공급을 외면한 건설기술자 관리행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建設業法을 개정, 소규모건축공사업을 신설키로 하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심의 받고 있는데 이 업종이 신설되면 기술자 스카우트 파동은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이 뻔해 그렇잖아도 건설人力의 高賃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經營難을 가중시킬 것이고 건설업의 高賃金은 他産業의 임금인상에도 파급되어 物價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최근 大韓建設協會는 국내 건설기술자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 바 있는데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건설기술자의 공급자수는 15만 8천 453명으로 이 중 不可用人力 7만 88명을 제외하면 가용인력은 8만 8천 3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不可用人力 7만 88명은 관공서, 정부기관·단체, 해외거주, 고령자, 군입대 등 건설업체에 종사할 수 없는 인력이다.

실제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가용기술인력은 8만 8천 365명인 데 반해 건설업계의 수요인력은 일반 및 전문업체 6만 9천 669명, 건설관련업체 3만 9천 165명 등 10만 8천 834명으로 추산돼 2만 469명의 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分析됐다.

특히 건설업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土木·建築기술자의 경우 공급자수는 11만 9천 216명

으로 이 중 △ 자격증 중복취득자 9천 800명 △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단체 등 취업자 8천 609명 △ 기타 건설외분야 종사자 3만 4천 286명 등 총 5만 2천 695명이 불가용人力으로 실제 가용인력은 6만 6천 52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수요인력은 8만 2천 222명으로 1만 5천 701명에 달하는 絶對人員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향후 건설기술자의 수요는 建設業 신규면허 실시시 현행 토목 또는 건축 단일면허의 土建免許 전환시 7천 764명에다 소규모건축업 등록시 수요 2~3만명을 합하면 최소한 2만 7천 764명에서 3만 7천 764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현재 부족인원 2만 169명에 향후 추가 소요인원까지 합하면 건설기술자의 부족인원은 최소한 4만 8천 233명에서 5만 8천 233명이나 된다는 계산이다.

이같이 기술자 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을 감안할 때 현건설업 면허기준상 20인으로 돼 있는 기술자의무보유가 과다하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면허기준대로 기술자를 20명 보유했을 때 업체당 1년에 최소한 150억원의 工事를 수주해야 하나 92년도 업체당 평균수주액은 92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법이 규정한 기술자보유수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더구나 도급랭킹 1천위 이하의 일반건설업체들은 많은 수가 1년에 10억원 내외의 수주실적을 올리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업체들에게 20명의 기술자를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패턴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 기술자들의 지방근무 기피로 지방소재 中小建設業體들은 모집공고를 해도 응시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의 지방취업시에는 연봉 5천만원 이상 지급에 숙소까지 제공하는 조건

으로 채용되고 있어 지방 중소건설업체들의 기술자 확보에 따른 경영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 계층별로도 기술자들이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건설업체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우를 잘해줘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들의 인건비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기술자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 현행 20인으로 돼있는 기술자 보유기준을 10인으로 완화해야 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建設業法改正案에 명시된 建設業免許 매년 발급 및 소규모 건축업등록제 신설은 기술자 수요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소정의 학력+실무경력+특별연수교육 등에 의한 자격부여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실무경력이 없는 자격증 소지자보다 실제 현장경험에 의해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대책으로 기술자격시험 회수를 현재 연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이론위주의 평가에 의한 자격증 부여보다도 경력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선진국형 기술자 배출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다가오는 건설시장개방에 대비 건설업체들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기술자관리를 획일적인 기준적용방식에서 탈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요망이다.

더구나 이같이 기술자가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당국은 현재 기업의 규모나 주주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보유토록 돼있는 기술자 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중소건설업체들의 內實 있는 경영을 유도해야 하고 기술자수요가 엄청나게 수반될 건설업면허주기 단축이라든가 소규모건축공사업 신설 등은 기술자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유보해야 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그렇지 않고는 ‘기술자 부족→스카웃 현상 →건설임금 상승→건설업 부실경영·타산업 임금 상승 파급·物價불안’이란 악순환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日刊建設 11월 9일자〉

## 건설현장의 효율적 안전관리 대책 마련 절실

’93 상반기 건설재해 경제적 손실  
8천여억원, 전체의 38.7%차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건설업종의 산업재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경제적 손실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7천9백여억원에 달해 산업재해에 따른 전체 경제적 손실액 중 38.7%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11월 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인 의식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연회에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권오석 회장은「건설업의 재해극복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까지 건설업종에서 만 2백52명의 근로자가 숨지고 1만2천1백82명이 부상을 입는 등 모두 1만2천4백34명이 재해를 당해 이에 따른 근로 손실일수 및 공사차질 등 간접손실과 산재보상금 등 직접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모두 7천9백8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우선 작업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데다 시간적·공간적으로도 작업내용 및 상황이 계속

변경될 뿐아니라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이 건설공기를 무리하게 앞당겼거나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적절한 공법의 변경, 그리고 사업주의 산재예방 의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같은 건설재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과 적게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구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산재보험 개별실적 요율제도 도입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와 함께 다각적인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보건정보 11월 15일자〉

## 안전관리비 효율적 활용이 최선

### 본협회 권오석 회장, 건설인 의식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 강연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건설업에서의 경제적 손실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경영측면에서도 사업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權五錫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장은 지난 3일 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2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건설인 의식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연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직도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인명은 경시한 채 최대한의 공기단축과 경비절감에 따른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權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총 1조8천5백14억원으로 건설업계 전체매출액의 5%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러한 수치는 사망 8백48명을 비롯, 총재해자 3만6천2백55명에게 직접 지급된 산재보상금 3천7백억원에 근로손실일수와 공사차질로 인한 간접손실액을 더해 추정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 재해로 인한 전체산업의 경제손실액은 4조6천6백억원이며 건설업은 이중 40%를 차지, 손실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만도 건설업의 경우 이미 8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특히 이러한 손실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전업종에 걸친 92년 경제적 총손실액은 91년에 비해 32.79% 늘어나 전년도 증가율 30.07%보다 증가폭이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에는 지난해 경제적 손실액이 91년의 1조2천8백여억원보다 무려 44.27%나 증가해 경영측면에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權 회장은 『건설재해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사전예방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후처리 위주의 안이한 생각을 가진 경영자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안전사고는 일반적 공식에 의해 추정되는 경제적 손실액 외에 상황에 따라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 자체적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 산재로 인한 손실액을 분석함으로써 좀더 실질적인 재해예방책 마련에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權 회장은 또 안전교육 미흡으로 인한 건설재해가 전체의 60%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안전교육 없이 근로자들을 현장에 곧바로 투입시켜서는 안되며 안전관리자들을 양성, 실질적이고 내용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합건설사 임원진을 비롯, 전문건설업체 대

표들도 다수 참석한 이날 강연회에서 權五錫 회장은 『현단계에 경영자로서 재해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책은 안전관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權 회장에 따르면 지난 88년부터 법제화된 표준안전관리비가 진단·교육·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만큼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것.

이밖에도 權 회장은 직장환경 개선에 더욱 주력함으로써 3D를 해결, 고령화하고 있는 기능공들의 연령층을 줄이고 본사 안전관리부서 직원들을 차츰 기술직으로 전환, 이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건설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신문 11월 15일자〉

## 100大건설社 '92災害率 확정

### 재해多發 74社 PQ信認度 감점 大型사고 發生 내년부터 入札 제한

勞働部, 각 發注기관에 통보

勞働部는 라이프주택개발 등 74개 災害多發 건설업체에 대해 PQ심사 신인도 평가시 1~3점씩 감점토록 하고 정부의 각종 포상 및 優秀施工業體 선발대상에서도 제외토록 각 發注機關에 요청했다.

16일 勞働部는 '92도급순위 1~100위 建設社에 대한 업체별 재해율(92년)을 발표하고 이중 災害率이 평균치(1.90)를 넘는 라이프주택개발, 일신진흥건설, 동양고속 등 74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PQ심사 신인도(±10점)평가시 최고 3점까지 감점토록 했다.

특히 평균재해율의 1.5배를 초과하는 라이프

주택개발 등 35개 業體는 3점을 감점하고 평균 재해율의 1.3~1.5배인 삼호 등 13개업체는 2점, 1.0~1.3배인 대호건설 등 26개업체에 대해서는 1점을 각각 감점하는 등 災害發生 정도에 따라 1~3점씩 감점토록 각 工事發注處에 통보했다.

勞働部는 또 평균재해율을 초과하는 이들 74개 建設業體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포상대상과 우수시공업체 지정시 선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建設業體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대형사고(3명이상 同時死亡)발생 건설업체에 대한 入札參加제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시 업체별 災害率에 따라 재해율이 낮은 업체는 제재기간을 1/2까지 감해주는 대신 재해율이 높은 업체는 제재기간의 1/2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勞働部는 앞으로 매년 100大건설사의 업체별 災害率을 공개키로 했는데 현재의 재해율 산출 방식이 사망자와 부상자를 동일한 재해1건으로 취급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내년부터는 사망재해에 일정한 가중치(사망자1명을 부상자 16명으로 봄)을 부여해 업체별 재해발생 정도를 비교하고 도급순위 101위이하 업체의 재해율도 필요시 조사·발표키로 했다.

### 〈'92년 도급순위 1백대 건설업체 재해현황〉

(순수건설분야)

재해율이 낮은순위	도급순위('92)	회사명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구분
1	12	선경건설(주)	161(3)	0.99	신인도
2	28	(주)청구	117(2)	1.03	평가: 0점
3	8	럭키개발(주)	249(16)	1.05	
4	4	삼성종합건설(주)	345(13)	1.07	
5	50	(주) 우방주택	125(2)	1.11	
6	39	금강종합건설(주)	47(1)	1.21	
7	20	삼성중공업(주)	91(2)	1.23	
8	42	한진종합건설(주)	59(1)	1.34	

# 소식

재해율이 낮은순위	등급순위 (92)	회 사 명	재해지수 (사망자)	재해율	구분
9	17	신안종합건설	51(0)	1.36	평균재해
10	91	강산건설(주)	49(0)	1.37	율(1.90)
11	68	화성산업(주)	47(2)	1.37	이내업체
12	10	(주)광주고속	240(11)	1.39	
13	77	덕산토건(주)	53(1)	1.46	
14	75	남양건설(주)	47(1)	1.47	
15	33	(주)신성	73(1)	1.48	
16	54	동현건설(주)	38(0)	1.51	
17	34	(주)기산	101(2)	1.54	
18	18	벽산건설(주)	156(3)	1.54	
19	89	청우종합건설(주)	37(1)	1.57	
20	15	롯데건설(주)	224(4)	1.66	
21	97	자유건설(주)	30(1)	1.67	
22	90	(주)동성	29(2)	1.69	
23	2	(주)대우	510(22)	1.83	
24	30	벽산개발(주)	70(2)	1.85	
25	46	공영토건(주)	98(1)	1.91	신인도평
26	45	대산건설(주)	55(1)	1.93	가: -1점
27	6	현대산업개발(주)	552(5)	1.94	
28	11	(주)우성건설	396(7)	1.94	
29	22	코오롱건설(주)	130(1)	1.97	
30	40	효자종합건설	31(1)	1.99	
31	53	대주건설(주)	63(0)	2.00	
32	5	대림산업(주)	565(15)	2.00	
33	9	쌍용건설(주)	290(9)	2.06	
34	80	(주)보성주택	68(3)	2.12	평균재해
35	35	(주)태영	176(7)	2.13	율(1.90)
36	63	영진건설산업(주)	116(2)	2.13	초과~
37	82	(주)서한	50(1)	2.14	30%(2.47)
38	83	(주)동성종합건설	67(2)	2.15	이내 업체
39	19	극동건설(주)	212(4)	2.16	
40	78	(주)한성	32(3)	2.17	
41	57	신동아건설(주)	218(3)	2.18	
42	24	삼환기업(주)	194(4)	2.23	
43	71	금광기업(주)	63(3)	2.25	
44	29	경남기업(주)	170(2)	2.26	
45	21	한일개발(주)	232(1)	2.37	
46	66	(주)미도파	94(2)	2.43	
47	3	동아건설산업(주)	356(8)	2.46	
48	84	해강종합건설(주)	72(0)	2.46	
49	1	현대건설(주)	1,207(35)	2.46	

재해율이 낮은순위	등급순위 (92)	회 사 명	재해지수 (사망자)	재해율	구분
50	86	대호건설(주)	40(3)	2.46	
51	48	고려산업개발(주)	109(2)	2.59	신인도평
52	27	(주)진영	214(9)	2.62	가: -2점
53	14	동부건설(주)	286(7)	2.64	
54	61	대아건설(주)	61(0)	2.65	
55	70	(주)삼의세라믹	103(0)	2.66	
56	88	학산산업개발(주)	106(4)	2.68	평균재해
57	43	한라건설(주)	115(0)	2.69	율30%
58	16	두산건설(주)	327(7)	2.74	(2.47)초
59	81	한일건설산업(주)	78(3)	2.75	과~50%
60	36	(주)동진주택	176(6)	2.75	(2.85)
61	51	서광산업(주)	105(1)	2.79	이내업체
62	92	(주)중앙건설	79(1)	2.84	
63	37	(주)삼호	150(4)	2.85	
64	73	장북건설(주)	111(0)	2.90	신인도평
65	79	경향건설(주)	77(3)	2.92	가: -3점
66	25	동림산업(주)	209(2)	2.94	
67	13	한신공영(주)	420(9)	2.95	
68	59	계룡건설산업(주)	123(1)	2.98	
69	38	남광토건(주)	174(1)	3.01	
70	26	유원건설(주)	236(5)	3.06	
71	94	진덕산업(주)	71(2)	3.13	
72	55	(주)신한	96(4)	3.15	
73	44	임광토건(주)	121(1)	3.15	
74	31	신화건설(주)	134(1)	3.27	
75	72	성원건설(주)	135(3)	3.37	
76	7	한국중공업(주)	129(3)	3.37	
77	65	일성종합건설(주)	95(4)	3.40	
78	85	동국산업(주)	91(3)	3.43	
79	49	고려개발(주)	122(4)	3.47	
80	41	삼익건설(주)	222(3)	3.60	평균재해
81	32	삼부토건(주)	252(14)	3.62	율50%
82	99	(주)국제종합토건	91(3)	3.71	(2.85)
83	67	국제종합건설(주)	151(2)	3.75	초과업체
84	96	신림종합건설(주)	64(0)	3.90	
85	69	진로건설(주)	117(1)	3.91	
86	64	한보철강공업(주)	183(6)	4.21	
87	52	(주)신일건설	92(0)	4.24	
88	74	(주)삼익주택	90(1)	4.29	
89	95	천지산업(주)	48(1)	4.31	
90	23	(주)한양	983(11)	4.41	

재해율이 낮은순위	도급순위('92)	회 사 명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구분
91	93	(주)삼환까부	53(1)	4.44	
92	100	(주)화인주택	53(0)	4.54	
93	58	범양건설(주)	73(0)	4.64	
94	47	성지건설(주)	183(2)	4.65	
95	60	진흥기업(주)	103(0)	4.67	
96	76	(주)동양고속	83(3)	4.70	
97	98	일신진흥건설(주)	109(1)	4.74	
98	56	라이프주택개발(주)	365(5)	7.10	

(비순수건설분야)

1	62	삼성엔지니어링(주)	20(0)	0.63	
2	87	현대정공(주)	10(0)	0.87	

<日刊建設 11월 17일자>

## 安全點檢 전문기관 확대

### 건설부, 建技法규칙 改正 내년 시행

建設部는 내년부터 建設工事安全點檢制가 시행됨에 따라 安全點檢전문기관을 韓國建設技術研究院을 비롯, 大韓土木學會, 韓國産業安全公團 등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建設部는 이같은 내용의 建設技術管理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建設部는 당초 건설공사안전점검을 韓國建設技術研究院에만 맡기기로 했으나 1개기관만으로는 안전점검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보고 △ 大韓土木學會 △ 大韓建築學會 △ 韓國建設安全技術院 △ 韓國産業安全公團 △ 韓國建設安全技術協會 △ 건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法人 등도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建技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부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日刊建設 11월 19일자>

## '92災害率 평균치이상인 '多發'社 優秀시공업체 指定대상서 제외

노동부, 내년 6월까지...100대업체중 74社 포함

勞動部는 지난해 災害率이 건설업 평균치를 넘는 建設業體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優秀施工業體 지정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19일 勞動部에 따르면 建設業界의 자율적인 재해예방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92년 災害率이 지난해 建設業평균재해율(1.90)을 초과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우수시공업체 선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勞動部는 土開公, 住公등 공공사 발주기관이 우수시공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업체의 災害率을 조회토록 하기로 했다.

勞動部는 또 건설업체의 올 災害率을 내년 6월중 발표, 재해율이 평균치를 웃도는 업체에 대해 94년 7월부터 95년 6월까지 우수시공업체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같은 災害多發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사망재해에 일정한 가중치(사망자1명을 부상자 16명으로 봄)를 부여해 業體別 재해율을 산정, 업계의 重大災害예방노력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勞動部의 이같은 조치로 優秀施工業體 선정 대상이 크게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建設業體의 재해줄이기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92도급순위 1~100위 100대 건설업체중 지난해 災害率이 평균치를 넘어 내년 6월말까지 우수시공업체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 라이프주택개발 △ 일신진흥건설 △ 동양고속 △ 진흥기업 △ 성지건설 △ 범양건영 △ 화인주택 △ 삼환까무 △ 한양 △ 천지산업 △ 삼익주택 △ 신일건업 △ 한보철강공업 △ 진로건설 △ 신림종합건설 △ 국제종합건설 △ 국제종합토건 △ 삼부토건 △ 삼익건설 △ 고려개발 △ 동국산업 △ 일성종합건설 △ 한국중공업 △ 성원건설 △ 신화건설 △ 임광토건 △ 신한 △ 진덕산업 △ 유원건설 △ 남광토건 △ 계룡건설산업 △ 한신공영 △ 풍림산업 △ 경향건설 △ 장복건설 △ 삼호 △ 중앙건설 △ 서광산업 △ 동신주택 △ 한일건설산업 △ 두산건설 △ 한라건설 △ 학산산업개발 △ 삼익세라믹 △ 대아건설 △ 동부건설 △ 건영 △ 고려산업개발 △ 대호건설 △ 현대건설 △ 해강종합건설 △ 동아건설산업 △ 미도파 △ 한일개발 △ 경남기업 △ 금광기업 △ 삼환기업 △ 신동아건설 △ 한성 △ 극동건설 △ 동성종합건설 △ 서한 △ 영진건설산업 △ 태영 △ 보성주택 △ 쌍용건설 △ 대립산업 △ 대주건설 △ 효자종합건설 △ 코오롱건설 △ 우성건설 △ 현대산업개발 △ 대산건설 △ 공영토건등 74개社에 이르고 있다.

〈日刊建設 11월 20일자〉

### 안전관리자 처벌 양도록

등부검찰에 요청 사망시 사법처리 대상서 제외

위상제고 사기진작 위해서 사업주 감독자만 책임추궁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산업안전관리자의 처벌을 지양하고 사업주를 비롯한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관례화시키기로 했다.

노동부는 22일 안전관리자의 위상제고 및 사기진작을 통한 안전업무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협조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관련자 사법조치시 노동부의 방침을 적극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産安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직무인 스템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사망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産安法 제15조의 의거,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안전교육계획 수립·실시,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조치건의, 재해발생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생산현장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스템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부가 이처럼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사업주를 비롯한 생산현장 관리감독자(부장, 과장, 직·반장)에게 있음을 들어 사망사고시 법적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나선 것은 최근 잇따른 대형참사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업무와 관련한 주요사안 결정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는 반면 본연의 직무 이외의 사안에 까지 책임추궁을 받는 등 역할과 기능이 크게 위축돼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7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각종 안전관리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과중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범위가 넓어져 안전관리 직무담당 회피는 물론 자격증 취득사실도 숨기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또 안전업무 활성화 일환으로 안전 관리자가 책임감·사명감을 갖고 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주 스스로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는 노동부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국의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대상사업장에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올들어 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40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신문 11월 22일자〉

## 工事施工前 이미 不實요인 內在

### 建技研분석, 부실공사의 40%

#### 設計부적정 原因 가장 커

건설공사의 不實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시공의 잘못보다 미흡한 기본계획과 설계의 부적정 등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상당수 건설공사가 시공전에 이미 부실요인을 안고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不實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부문의 기술력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건설기술연구원의 李泰植건설관리연구실장이 지난 86년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監督院의 公共공사 감사실적 자료를 토대로 유형별 부실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부실공사로 지적된 총 3천657건의 토목·건축·설비공사중 설계의 부적정이 부실원인으로 밝혀진 공사는

전체의 40.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부당시공(25.8%) 시공관리부적정(7.6%)등 시공과 관련한 부실원인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상당수의 건설공사가 초기 設計단계부터 부실요인을 알고 안고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工種別로는 土木의 경우 대상공사 1천811건중 799건이 설계부적정으로 판명, 44.1%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건축이 671건의 38.4%인 258건, 설비가 1천175건의 37.1%인 43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계획 및 제도의 부적정으로 인한 부실공사도 전체의 13.7%인 504건에 달했으며 계약부적정 286건(7.8%), 기타 147건(4%) 등으로 조사됐다.

발주기관별로는 地方自治團體가 1천 359건(37.1%) 국가기관 1천 252건(34.2%) 정부투자기관 1천46건(28.6%)등으로 나타났다.

〈日刊建設 11월 24일자〉

## 建設現場 내달 일제 安全點檢

### 勞働部, 400여개대상 墜落等 예방위해

#### 重大災害발생 事業主 사법처리

勞働部는 다음달중순 전국 建設現場에 대해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7일 勞働部에 따르면 建設중대재해를 예방키 위해 내달중순경 전국 400여개 建設現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勞働部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추락 방지용 안전망, 건설용 리프트, 엘리베이터홀등 개구부의 안전조치상황과 안전모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및 안전대고리걸이줄 미설치등 墜落재해 방지시설

에 대해 중점점검키로 했다.

특히 점검대상 建設現場에 대해 점검일정과 내용등을 사전에 통지해 안전시설을 자율적으로 改善토록 하되 점검시 붕괴등 대형사고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무기한 作業中止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개선명령등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重大災害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現場所長을 구속하는 등 강력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勞動部는 내달중 産業安全保健法시행규칙을 개정, 3명이상 동시 사망하는 大型事故를 유발한 建設업체에 대해 4~12개월동안 각종 公共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日刊建設 11월 29일자〉

## 建設현장 重大재해 줄어든다

勞動部, 올 死亡 600명선 昨年比 30% 감소

5년만의 減少...經濟的 손실도 半減

올들어 建設災害가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올 한해동안 전국 建設現場에서 재해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수도 작년보다 3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勞動部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建設災害감소 추세가 올들어 더욱 뚜렷해지면서 建設업 月평균재해자수가 지난 91년 3천525명에서 92년 3천108명, 올해는 2천30명등으로 2년새 4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建設현장에서 災害로 사망한 重大재해자수는 지난 89년 461명에서 90년 673명, 91년 801명, 92년 848명 등으로 해마다 30%이

상씩 크게 늘어났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9월 말현재 384명으로 前年同期보다 오히려 31% 정도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여 5년만에 처음으로 建設重大災害가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勞動部는 올 한해 建設 重大災害者는 지난해(848명)보다 30% 이상 줄어든 600명선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建設災害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도 지난해 3조5천억원에서 올해는 1조6천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올들어 建設災害가 큰 폭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勞動部가 建設안전담당부서인 建設勞務安全課를 신설, 적극적인 예방에 나선데다 建設業體들도 안전교육이수수첩제 실시 등 자율적인 災害豫防활동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建設業界는 업계 스스로의 현장안전관리노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勞動部가 내년부터 대형사고를 유발한 建設業體에 대해 최장 6개월간의 영업정지와 12개월간의 公共工事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하는 등 재해유발억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내년에는 建設災害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日刊建設 12월 14일자〉

협회소식

**\* 회원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 郭決鎬 회원 (건설부 상하수도국 국장)
- 金在錫 회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 金昌龍 회원 (한보철강공업(주) 전무)
- 朴宰永 회원 (한일개발(주) 전무)

**\*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

- 金在浩 회원 (강남구 도곡동 럭키APT 105-304 : '94. 2월 예정)
- 朴熙鎭 회원 (강남구 도곡동 럭키APT 110-806)

※ 회원님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변동사항이 계신 분은 협회 총무부나 비서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협회 朴弼洙 고문과 金善福 전문위원은 첨단진단장비인 TR-300 구입차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에 다녀왔다.
- 건설안전실무협의회는 9월 24일 본협회 제1 강의실에서 안영수 노동부 산업안전국장(현 노동부 노사정책실장)을 초청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현안과제에 대해 토론 모임을 가졌다.
- 본협회와 한국산업안전학회가 공동주최한 「'93 건설안전학술 심포지엄」이 10월 15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 본협회 권오석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본심포지엄이 건설분야의 선진국화인 신기술, 신공법 개발을 제시하는 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權五錫 회장을 비롯한 본협회 직원일동은 10월 16일 대전 EXPO를 관람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 한국기술사회의 주최로 10월 25일 과학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제23회 한일기술사합동 심포지엄」에서 본협회 洪鍾敏 전문위원은 '건설안전' 분야에서 '안전교육이 건설재해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 본협회 權五錫 회장은 11월 3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의식개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강연회」에서 '건설업의 재해극복 전략'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11월 26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보건대상 시상식 및 무재해 성공사례 발표회」에서 본협회 서병직 총무부장이 무재해 1천만명 서명운동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 11월 2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는 이사회가 있었다.
- 본협회 權五錫 회장은 12월 8일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안전관리 담당임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사고 실태와 예방 대책'에 관한 강연을 가졌다.
- 본협회 權五錫 회장은 12월 9일, 해운대 조 선비치호텔 대연회의실에서 대한설비공사협회 부산시회의 회원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설비전문건설인 경영자 연수회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강연을 가졌다.
- 본협회 신입사원 모집에 총 1,056명이 응모한 가운데 서류전형, 1·2차 면접을 거쳐, 신설된 기술연구직에 3명, 기술직 11명(건축 7, 토목 4), 비서직 2명, 사무직 2명 등 총 18명이 최종합격되어 12월 1일자로 발령, 정식사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신입사원들 중 기술연구직, 기술직의 14명은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었던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기도 했다.
- 본협회 전임직원은 '94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가나안 농군학교에 입교해서 정신교육을 받는다.